

# 민주, 백남기사건 재수사 등 '10대 과제' 제안

### 국민나라위 보고서 발간...전교조 재합법화 등 담아

### 통합정부추진위도 5당 공동공약 분석 靑에 전달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농민사건 재수사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2일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도 즉각 "일부 정책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과제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할 것 ▲세월호 선제 조사위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혁 4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단합시정지도)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 정치개입 금지 선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고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었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연구원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며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이날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동공약을

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과제를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통합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안서에 담긴 10대 정책은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이다.

위원회는 공동공약 가운데 역대 정부가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갈등요소로 실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면밀히 진단한 뒤 대안을 도출했다.

특히 위원회는 대안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리 인준안 이르면 29일 처리

### 4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헌재소장은 내달 22일

여야는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원만히 채택될 경우 29일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의 표결에 부치고 여의치 않을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또 늦어도 다음 달 2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화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추경 관련 시정연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필요하다"며 "6월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추가로 인제 열지는 오는 26일 수석부대표 회의를 다시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6월 22일 이전에 본회의가 추가로 잡히면 시정연설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임명동의안은 6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별로 번갈아 가는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직의 경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점으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국회의 석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文정부 국정 지지율 81.6%

### 리얼미터 조사 호남 94.5%...민주 53%·한국당 12%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집계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섰으며,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고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0.1%였다. 나머지 8.3%는 '잘 모름'이었다. 리얼미터는 "문 전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1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 54.8%, 이명박 전 대통령의 76.0%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호남(94.5%)에서 국정지

지율이 90%대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84.0%)과 서울(81.9%), 강원(80.0%), 대전·세종·충청(79.2%), 부산·울산·경남(76.6%), 대구·경북(72.8%), 제주(71.0%) 등이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1주 전보다 8.6%포인트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12.4%로 0.6%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7.7%, 바른정당은 1.5%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6.6%로 한주 만에 3.0%포인트 떨어지며 지난주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이틀 지지층 다수가 민주당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협치 합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만나 6월 임시국회 운영 및 여·야·정 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 국민의당 8월 전대 가닥...비대위원장 주승용 유력

### 정동영·손학규·김한길·안철수 등 당권 도전 가능성

국민의당이 오는 8월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로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주승용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을 포함, 전반적인 당내 의견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7월3일, 바른정당이 6월 26일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점에서 국민의당만 전당대회를 연말에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당의 방향성 정립 등을 통해 재

도약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임기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내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6개월 임기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외부 인사를 찾기도 어려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름들이 벌써부터 당내에 회자되고 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가 강력한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와 전정배 전 대표, 김한길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선명 야당론' 등 당의 정체성 확립을 내세우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확장성 측면에서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내부 이견 등으로 중앙위 재구성 이후,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정당 6월26일·한국당 7월3일 전대

구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2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열기로 했다고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밝혔다.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해 12월 16일 이정현 당시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약 7개월 만에 정식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셈이다.

정 권한대행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을 향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도 일축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 내 정국 대응의 중요성이 막중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각종 원내협상과 인사청문회,

입법 과제 대처 등 체계 부여된 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당은 전대준비위원회를 꾸려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6월26일 당원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김세연 사무총장이 밝혔다.

지난 2월 창당된 바른정당은 정병국의 원을 초대 대표로 추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문호개방 등을 이유로 대표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 ▶ 자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 ▶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 ▶ 인원 : 선착순 10명
- ▶ 비용 : 100,000원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